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발 신 2016충선시민네트워크 (담당 : 이재근 공동사무처장 010-9727-4035 ask2016change@gmail.com)
김남희 정책팀장 010-4069-0322
제 목 [보도자료] 2016충선넷, 1차 공천부적격자 1차 명단 발표 기자회견 개최
날 짜 2016. 3. 3. (총 21쪽)

보 도 자 료

2016충선넷, 1차 공천부적격자 발표 기자회견

전국 시민단체들의 논의와 시민제보를 종합해 황우여, 최경환, 김현종, 김석기, 김진태, 이노근, 한상률, 박기준, 김용판 등 9명 선정
각 정당에 1차 명단 전달하고, 부적격후보자들 낙천 촉구!

일시 : 2016.3.3.(목) 오전 11시,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1. 전국 33개의 부문·의제·지역별 연대기구와 1천개가 넘는 시민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2016 충선시민네트워크”(www.2016change.net, 이하 “2016 충선넷”)가 오늘(3/3) 오전 1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공천부적격자 1차 명단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 2016충선넷은 황우여(새누리당, 국회의원, 인천 연수구갑), 최경환(새누리당, 국회의원, 경북 경산시청도군), 김진태(새누리당, 국회의원, 강원 춘천), 이노근(새누리당, 국회의원, 서울 노원갑), 김현종(더불어민주당, 전 통상교섭본부장, 인천 계양갑 예비후보), 김석기(새누리당,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경북 경주시 예비후보), 한상률(새누리당, 전 국세청장, 충남 서산태안 예비후보), 박기준(새누리당, 전 부산지검장, 울산 남구갑 예비후보), 김용판(새누리당,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대구 달서구을 예비후보) 등 9명을 1차 공천부적격자로 선정해 발표했다.
3. 지난 2월 말부터 충선청년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역사정의실천연대, FTA대응범국민대책위원회,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인천평화복지연대 및 강원연대회의, 울산시민연대 등 부문별·의제별·지역별 연대기구와 각 단체에서도 앞 다투어 낙천촉구명단이나 심판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2016총선넷은 각 부문의제·지역별 연대기구와 각 단체들이 지금까지 발표한 낙천촉구 명단과, 지난 2월 23일부터 진행한 공천부적격자 시민신고 결과를 종합하여 제시된 부적격 사유가 분명하거나 선출직 공직자 및 국민의 대표자가 되기에는 자질과 자격에 명백한 문제가 있는 인물들을 중심으로 공천부적격자 명단을 1차적으로 선정했다.

4. 2016총선넷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날 발표 이후 이어질 국가기관 선거개입 시민감시 캠페인, 2차 공천부적격자 발표 계획, 공천부적격자 시민제보 캠페인 결과 발표 및 각 정당 공천심사위원회에 전달 계획, 유권자위원회 조직 및 활동 계획, 약속(정책)운동 계획 등 추가적인 사업계획도 발표했다. 끝.

- 붙임 1. 2016총선넷 1차 공천부적격자 발표 기자회견 순서
- 붙임 2. 2016총선넷 공천부적격자 선정자료
- 붙임 3. 2016총선넷 향후 사업계획
- 붙임 4. 기자회견문
- 별첨자료 1. 각 단위 낙천(심판) 명단 발표자료 종합

■ 붙임 1. 2016총선넷 1차 공천부적격자 발표 기자회견 순서

<기자회견 순서>

사회 : 2016총선넷 공동운영위원장

1. 인사말
 - 2016총선넷 공동대표
2. 공천부적격자 관련 각계 발언
 - 각계 대표
3. 2016총선넷 공천부적격자 명단 발표
 - 2016총선넷 조직위원장
4. 향후 사업계획 발표
5. 기자회견문 낭독
6. 질의응답

2016총선넷 1차 공천부적격자 선정자료

2016.03.03. 2016총선넷 운영위원회

1. 2016 총선넷 1차 공천부적격자 명단 발표 배경과 선정과정

- 2016총선넷은 발족 시 부적격 후보자에 대한 낙천낙선운동을 진행하겠다는 것을 공표하며 발족함
- 이에 호응하여 2월말부터 각 부문·의제·지역별 연대기구, 개별 참가단체에서 심판을 촉구하거나 공천에 반대하는 명단을 발표함(6개 의제·부문별 연대기구, 3개 지역 총 75명)
- 2016 총선넷은 각 부문별 지역별 연대기구의 공천부적격자 발표와 함께 시민들의 참여와 제보를 받기 위해 공천부적격자 시민 신고/제보 캠페인을 진행해 단체와 개인으로부터 200여건의 신고/제보를 접수함(3/2 현재)
- 각계각층 부문·의제·지역별 연대기구 및 단체들이 이미 발표한 심판명단, 낙천을 요구하는 인사들 중에서도 각 부문·의제·지역별 연대기구나 관련 단체들이 최악의 부적격자로 지목한 인사들을 우선적으로 검토
- 공천부적격자 신고 및 제보 캠페인에 접수된 부적격자 제보내용을 함께 검토
- 동시에 공직자 및 국민의 대표자로서의 자격과 기본적인 자질, 책임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인사들로 압축하여 선정

2. 2012총선넷 심판대상 후보자 명단 선정 경과

- ▶ 1월 18일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이번 총선과 관련해서는 최초로 김석기 예비후보에 대한 낙천 촉구 입장 발표 및 수차례 항의방문(새누리당사, 경주 지역 사무실 등) 진행

- ▶ 2월 17일 2016총선넷 발족기자회견 개최, 낙천낙선 기준 예시안 제시
- ▶ 2월 22일 2016총선넷 1차 운영위원회. 공천부적격자 기준 검토, 선별방식 논의
- ▶ 2월 23일 총선청년네트워크 출범 및 낙천축구 명단 18인 발표
- ▶ 2월 23일 환경운동연합 19대 국회 반 환경의원 17인 발표
- ▶ 2월 23일 2016총선넷 공천부적격자 시민 신고/제보 캠페인 시작
- ▶ 2월 24일 인천평화복지연대 등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 황우여, 윤상현, 김현중 등 6인 낙천축구 명단 발표
- ▶ 2월 25일 경제민주화와 이들의 총선연대, 경제민주화 파기 및 서민경제 파탄 인사로 최경환 낙천 축구
- ▶ 2월 26일 2016총선넷 2차 운영위원회¹⁾, 1차 공천부적격자 명단 및 선정사유 검토하고, 일부 명단 추가와 세부적인 선정사유 기술은 공동운영위원장단·운영위원·사무처 연석회의에 위임
- ▶ 2월 28일 테러범자 국민감시 악법인 ‘테러방지법’ 강행 주도 인사들(법안 대표 발의자 등)에 대한 낙선운동 강력 경고 2016총선넷 긴급성명 발표
- ▶ 3월 1일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등, 역사정의 파괴 낙천축구 5인 명단 발표
- ▶ 3월 1일 2016총선넷 공동운영위원장단·운영위원·사무처 연석회의에서 1차 공천부적격자 명단 최종 검토 진행
- ▶ 3월 2일 강원연대회의 낙천 축구 명단 6인 발표
- ▶ 3월 2일 FTA대응범국민대책위, 한미FTA 강행에 앞장선 김현중, 김종훈, 정운천 후보 낙천 축구
- ▶ 3월 2일 울산시민연대 공천부적격자 명단 발표
- ▶ 3월 2일 2016총선넷 운영위원회 최종명단 승인
- ▶ 3월 3일 2016총선넷 1차 공천부적격자 명단 발표

1) 2016총선넷에 참여한 33개의 연대기구와 가계각층의 시민사회단체를 대표한 총 40여명의 운영위원들이 참여하는 총선넷 의사결정 기구. 낙선운동 대상자 선정 시에는 운영위원회 논의 뿐만 아니라 유권자위원회의 의결까지 거칠 예정이다.

3. 공천부적격자 선정기준

1) 1차 기준 - 2016 총선넷이 발족 시 제시한 기준

- 부정부패비리 사건 주도자 및 주요 실행자
- 민주주의 파괴 및 인권 침해 사건 주도자, 군사독재 정권의 핵심 부역자
- 국민들을 위한 주요 민생입법에 대한 반대 주도자
- 노동개악 등 노동민생 정책 개악 주도자
- 세월호 참사 등 진상규명 방해 및 세월호 참사 유가족 음해·망언 주도자
- 용산 참사와 같은 국가폭력행위 주도자
- 국정원, 국방부, 경찰 등 국가기관의 불법부당 선거개입 주도자
- 성폭력 등 반사회적 행위로 크게 물의를 일으킨 자
- 역사정의를 파괴하고 국정교과서 강행, 위안부 합의 비호 앞장선 자
- 탈핵에 반대하고 환경파괴에 앞장선 자
- 기타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가 합의로 선정한 자

2) 추가 기준 - 총선넷 운영위원회에서 합의한 추가 기준

- 청년들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에 반대하거나 불법·부당한 인사 청탁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정당한 일자리를 빼앗고 청년들을 좌절케 한 자
- 국민이나 약자들을 상대로 막말과 조롱을 일삼아 공직자나 국민의 대표자로서 부적절한 자
- 국민 안전 관련 규제를 무분별하게 완화하고, 국민을 불안하게 하거나 위태롭게 하는 정책에 앞장선 자

3) 1차 낙천(심판)명단 검토 대상자

- 전·현직 국회의원, 전직 고위공직자를 1차 대상으로 검토
- 2016총선넷에 참가한 (부문/의제/지역별)연대기구나 각 단체가 이미 발표했거나 제출한 심판 대상자
- 시민들이 제보한 공천부적격자(2.23일부터 제보 캠페인이 활발하게 진행 중)
- 이들 중 공천부적격 사유가 명백하고, 공직자 및 국민의 대표자로서 자격과 기본적 자질, 책임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후보자

3. 공천부적격자 1차 명단

1) 황우여(새누리당, 국회의원, 인천 연수구갑)

- 주요경력 : 교육부 장관, 사회부총리(2014.08 ~ 2016.01), 19대 국회의원 (2012~현재)
- 심판명단 제안 단체 :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인천평화복지연대, 시민제보

○ 선정사유

- 박근혜정부의 교육부장관으로 학교 현장과 국민 의사를 무시하고 2015년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주도
- 2015년 10월 12일 당정협의 이후 하루 만에 국정화 전환 예고고시를 한 데 이어 11월 3일 확정고시 발표. 이 과정에서 여러 법률을 무시하고 위반
- “국사 과목은 하나의 권위 있는 교과서가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한다”(2015.1.8.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
- 역사교사 및 역사연구자 폄훼발언 : “과거 대학의 역사 전공 학생들이 시위 때문에 학업을 잘 하지 않아 지금 역사 교육이 잘 되지 않는다”(2015.10.20. 한국대학교교육협의회 간담회)
- 누리과정 예산 배정 방치로 지방교육재정 악화와 보육대란 야기
- 2012년 총선유권자네트워크 집중낙선대상자(정교분리 위반)

○ 선정의 변

- 2015년 민주주의와 헌법을 훼손한 한국사 국정화를 주도한 교육부장관으로 헌법과 법률을 지켜야 하는 공직자로서의 기본적인 자격과 자질이 부족함

2) 최경환(새누리당, 국회의원, 경북 경산시청도군)

- 주요경력 : 기획재정부 장관, 경제부총리(2014.07~2016.01), 19대 국회의원 (2012~현재)
- 심판명단 제안 단체 : 경제민주화와먹고사는문제해결을위한을들의총선연대, 2016청년총선네트워크, 시민제보

○ 선정사유

-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실종과 민생파탄의 핵심책임자. 박근혜 정부 경제부총리로 재직하며, 노동개악을 주도하였고, 경제민주화 공약의 실종에 앞장섰으며, 재벌특혜 및 재벌을 위한 규제완화에 앞장섬, 현 시기 경제위기의 책임자
- 자신의 국회의원실에 근무했던 인턴을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채용하도록 청탁하여 실제 자격이 없는 의원실 인턴이 채용됨. 전국의 청년들에게 절망과 큰 분노를 주었음. 또한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유무형의 압력으로 이러한 사실이 공개되는 것을 은폐하려 하였다는 의혹도 제기되었음.
- “전월세 상한제는 주택 가격을 폭등시킬 우려가 있다.” 며 전월세상한제 거부 (20115.10.6. 기재위 국정감사)
- 3/2 발표된 설악산을 망가뜨리는 국회의원 후보 낙천낙선 리스트에 선정(주최 : 설악산국립공원지킴이국민행동 등)

○ 선정의 변

- 현 정부의 민생파탄, 경제위기의 책임자. 자신의 국회의원실 인턴을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취업 청탁해 실제 취업시킴. 이러한 사실을 은폐하려한 의혹도 제기됨. 청년세대를 분노하게 하여 청년총선네트워크의 공천반대 후보자로 지목됨.

3) 김진태(새누리당, 국회의원, 강원 춘천)

- 주요경력 :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지청장(2008~2009), 19대 국회의원 (2012~현재)
- 심판대상 제안 단체 : 강원연대회의, 백남기농민의 쾌유와 국가폭력 규탄 범 국민대책위원회, 시민제보

○ 선정사유

- 국회윤리위원회 4회 제소 등 막말을 일삼고 근거 없는 색깔론을 펴, 공직자로서 기본적인 자격이 부족함
- 국민모독 막말. 2013년 10월 8일 박근혜 대통령 유럽 순방에 동행할 당시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촛불집회에 참여한 유학생과 교민들에게 대한민국 국민인 파리시위대에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하겠다”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림. 이는 주권자인 국민들의 정치적 반대행위에 보복을 하겠다는 발언으로 공직자로서 심각한 결격사유에 해당
- 색깔론과 막말로 야당과 야당 정치인 매도.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2014년 12월 15일 국회 현안질문에서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라면 근거 없이 대통령을 중상모략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정당에까지 손을 뻗치는 게 우리나라 제1야당의 현주소”라며 “이러니 ‘중북숙주’ 소리를 듣는 것”이라고 새정치민주연합에 색깔론 제기. 새정치연합 박지원 의원의 방북을 놓고 “그분은 김정일 사망 3주기를 맞아 조화를 전달하려고 방북을 추진 중”이라며 “DJ(김대중 전 대통령) 5주기 때는 북한에 가서 (조화를) 받아왔는데, 국회의원이 김정일·김정은의 조화 배달 심부름꾼이냐”고 비난.
- 세월호 인양관련 말바꾸기와 막말. 세월호 참사 이후 세월호 희생자 수습이 계속될 때에는 세월호를 인양하자 주장하고, 이후 세월호 실종자 가족이 인양을 요구하자 인양에 반대. 2015년 4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세월호 선체는 인양하지 맙시다. 괜히 사람만 또 다칩니다. 대신 사고해역을 추념공원으로 만듭시다. 아이들은 가슴에 묻는 겁니다.”라는 글을 올려 희생자 수색을 위해 인양을 요구하는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에게 반인륜적 언행.

- 2015년 11월 19일 국회에서 열린 김수남 검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11월 14일 민중총궐기대회 당시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백남기 농민의 중태 원인에 대해 ‘빨간 우의를 입은 사람이 상해 원인인 것처럼 보여진다’는 황당한 주장을 펴 경찰의 폭력진압에 대해 두둔.

○ 선정의 변

- 잦은 막말과 색깔론으로 국회 윤리위원회에 4회 제소되는 등 공직자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 자격이 미달. 정부를 비판하는 국민에게 보복하겠다는 취지의 발언과 세월호 참사 유가족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과 자존감을 짓밟는 발언을 일삼음.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되기에는 심각한 결격사유임.

4) 이노근(새누리당, 국회의원, 서울 노원갑)

- 주요경력 : 노원구청장, 19대 국회의원(2012~현재)
- 심판대상 제안 단체 : 환경운동연합, 2016총선청년네트워크, 시민제보

○ 선정사유

- 원전 확대 및 핵무장 주장, 4대강 사업 옹호, 국토 난개발(규제완화, 케이블카, 국립공원 막개발) 조장 반환경 국회의원

<환경운동연합 제공 반환경 국회의원 선정 사유>

-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지금이라도 4대강 주변뿐이 아니라 여러 강 주변에 수로라든지 또는 지천이라든지 이것을 해야 된다”며 4대강 후속 사업을 강하게 주장.
- 국토생태분야에서는“정부에서는 억지로 우겨 가면서 어깃장을 놓으면서 그린벨트라고 하는데 법률상 그린벨트 지정해서 그런 것이지 그린벨트가 아닌데 왜 자꾸 그린벨트라고 그래요. 과감히 해제해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공장·산업부지라든지 주택이라든지 이런 것 해주는 게 맞지”라면서 규제 완화를 주장.
- 원전분야에서는“이것을 아주 구속력 있는, 예를 들어서 ‘무슨 전시라든가 문제가 생길 때는 핵을 배치를 한다, 또는 투입을 한다’라는 구속력 있는 최소한의, 선언 수준이 아니라 협정 수준이라도—정부 간의 협정 수준—더 나아가서는 조약 수준에까지 이제 우리가 거론을 해야 될 때가 됐다고 봅니다.”며 핵무장 요구.
-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에 대한 규제를 전면 완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안)대표 발의하고, 전월세 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반대하여 청년들의 주거문제 해결에 역행하는 정책적 활동을 펴 총선청년네트워크의 공천부적격자로 선정
- "(야당 의원들이) 조그만 단서를 갖고 탐정소설 쓰듯 작가적 상상력을 발휘해 단정하고, 확대하고, 왜곡·발전시킨다"며 "'버릇을 고쳐야 한다'고 발언(2015. 12. 15. 국회본회의).
- 이번 사태가 발생해 검찰이 관련자를 기소나 불기소 재판에 회부하면 문제가 좌파 검사 자칭 진보 검사, 판사 역시 진보 판사라든지 좌파 판사들이 무협의·불기소·무죄 판결을 내놓은 게 상당히 목격됐다”(2015. 11. 16.)고 발언

○ 선정의 변

- 19대 국회의원 중 가장 반환경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국회의원으로 환경단체들이 공천부적격자로 선정

5) 김현중(더불어 민주당, 전 통상교섭본부장, 인천 계양갑 예비후보)

- 주요경력 :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본부장(2004.07 ~ 2007.08)
- 심판명단 제안 단체 : FTA대응범국민대책위원회(구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인천평화복지연대, 시민제보

○ 선정사유

- 국민 다수가 반대했던 주권침해, 퍼주기 협상인 한미 FTA 협상 최종 책임자. 김현중 전 통상교섭본부장은 정부 관료 차원에서 한미FTA를 있게 만든 총 책임자임. 추진과정에 공청회조차 열지 않고 한미FTA협정을 밀실에서 추진.
- 한국의 통상교섭본부장임에도 교섭과정에서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이 위키리크스의 폭로로 확인됨. 위키리크스의 폭로에 의하면 노무현 정부 당시인 2006년 7월25일 전문에선, 당시 보건복지부가 미국이 반대하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추진하자 김현중 통상교섭본부장이 버시바우 대사에게 전화를 걸어 “한국 정부가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담은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을 입법 예고하지 않도록 죽도록 싸웠다”고 강조한 것으로 나옴. 협상 과정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여 미국과의 협상에서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하는 대신, 오히려 미국 정부의 이익을 위해 보건복지부 등 한국의 정부부처와 싸웠다고 밝히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이 확인됨.
- 김현중 후보자의 한미FTA에 대한 입장은 2012년 대선 당시 내걸은 ‘한미FTA 비준반대-재협상’이라는 더불어민주당의 당론과 공약에도 정면으로 배치됨

○ 선정의 변

- 국민의 동의 없이 주권침해 한미FTA협정을 졸속으로 추진한 책임자로 협상과정에서도 대한한국과 국민의 이익을 저버렸다는 평가를 받는 등 공직자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자격에 미달.

6) 김석기(새누리당,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경북 경주시 예비후보)

- 주요경력 : 한국공항공사 사장(2013.10 ~ 2015.12), 주오사카 총영사관 총영사(2011.02 ~ 2011.10), 서울지방경찰청 청장(2008.07 ~ 2009.02)
- 심판명단 제안 단체 :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시민제보

○ 선정사유

- 2009년 1월 폭력적인 강제진압 강행으로 5명의 철거민과 1명의 경찰이 생명을 잃은 ‘용산참사’의 책임자
- 서울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2009년 1월, 경찰 스스로 만든 ‘집회 시위현장법 진행 매뉴얼’을 무시하고 용산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특공대 강제진압을 최종 승인. 진압작전을 승인하고, 지휘하였음에도 당일 무전기를 꺼 두었다는 무책임한 변명으로 일관함. 무전 녹음내용이 공개되고서야 사퇴함.
- 다섯 명의 시민과 한 명의 후배 경찰관을 죽음으로 내몰았으면서도 책임을 통감하고 자숙하기보다는, “진압은 정당했다”라고 말하는 등 돌아가신 철거민을 모욕하고, 유가족들에게 상처를 주는 발언을 계속함.
- 2011년 2월 일본 오사카 총영사로 임명되어 보은인사라는 비판을 받음. 3년 임기의 총영사직을 부임 8개월 만에 그만둠. 후임자조차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자신의 총선출마 준비를 위해 무작정 귀국. 2013년 10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한국공항공사 사장으로 재직하다 임기 3년을 10개월 남겨두고 또 다시 총선출마를 위해 사퇴.
- 2012년 총선유권자네트워크 집중낙선대상자(용산참사)

○ 선정의 변

- ‘용산참사’의 책임자임에도 한 번도 제대로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 또한 맡은 공직을 더 좋은 자리를 위해 헌신짝처럼 버리는 행태를 두 번이나 거듭함. 공직자로서의 기본적인 자세와 자격이 부족하여 선정.

7) 한상률(새누리당, 전 국세청장, 서산태안 예비후보)

- 주요경력 : 국세청장(2007.11. ~ 2009.01.)
- 심판명단 제안 단체 : 참여연대, 시민제보

○ 선정사유

- ‘그림로비’와 ‘골프인사청탁’ 의혹으로 해외도피. 2008년 연말 포항지역 유력 인사들과 골프를 치고 식사를 함으로써 내각 입각 청탁 의혹을 불러일으켰으며, 2007년초 국세청 차장 시절 당시 전군표 국세청장 부부와 저녁식사를 함께한 자리에서 시가 5천 여만원의 최옥경 화백의 ‘학동마을’ 그림을 선물로 주었다는 로비 의혹이 제기되었음. 이에 2009년 1월 15일 자진사퇴한 후 검찰 조사를 피해 해외 도피, 2011년 ‘기획입국’설이 돌며 입국.
- 2011년 검찰은 주정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과 전군표 전 청장 측에 ‘학동마을’ 그림을 뇌물로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나머지 의혹은 전부 ‘혐의 없음’으로 판단. 이명박 정권과 관련된 태광실업 특별세무조사와 관련된 직권남용, 골프 접대를 비롯해 이상득 국회 부의장과 측근에 대한 연임로비 의혹은 무혐의 처분. 퇴임 후 출국해 미국에서 대기업들로부터 자문료 명목으로 수 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것도 무혐의 처분. 대법원에서 일부 기소된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검찰의 전형적인 봐주기와 짜맞추기 수사의 결과임.
- 정권에 봉사하는 편파적인 표적세무조사의 주역. 2008년 7월 노무현 정권의 측근기업으로 알려진 박연차회장의 ‘태광실업’에 대한 표적 세무조사를 진행했음. 이 과정에서 태광실업측의 세무조사 무마로비 대상이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음. 표적 세무조사는 국세청 김동일 계장의 양심선언으로 확인된 바 있음.

○ 선정의 변

- 정권에 봉사하기 위해 공직자로서의 권한을 남용. 각종 의혹들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음, 시민들의 제보가 빗발쳤고, 출마가 아니라 특검 등을 통해 수사를 받아야 할 인물로 공천부적격자로 선정.

8) 박기준(새누리당, 전 부산지검장, 울산남구갑 예비후보)

- 주요경력 :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2009.08~2010.07)
- 심판대상 제안 단체 : 울산시민연대, 시민제보

○ 선정사유

- 스폰서 검사 의혹 및 이로 인한 면직과 면직정당 대법판결. 스폰서검사로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되어 법무부에 의해 면직처분 되었고, 행정소송을 진행했으나 대법원에서 면직이 확정됨.
- 2010년 4월 20일, 'MBC PD수첩'의 보도를 통해 박기준 부산지검장과 한승철 대검찰청 감찰부장 등 적어도 57명 이상의 전·현직 검사들이 부산경남지역 건설업자로부터 수년 동안 금품은 물론 성매매를 포함한 향응 접대까지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됨
- 2010년 6월 법무부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스폰서 검사'에 연루된 검사 10명 가운데 박기준 부산지검장을 면직키로 의결. 검사징계위원회는 박기준 부산지검장이 2009년 6월 서울 강남의 한 일식집에서 '스폰서 검사'를 폭로한 건설업자 정OO씨로부터 13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하고, 또 2009년 8월~2010년 2월 접대 의혹 사건과 관련해 보고 누락, 지휘·감독 태만 등의 비위를 저지른 혐의를 인정. 2010년 7월 대통령이 면직처분.
- 박기준 지검장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2011년 1월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온갖 유혹과 압력을 이겨내고 오로지 사명감만으로 성실하게 법질서 확립과 부정부패 척결에 앞장서온 수많은 검사들의 공지와 자부심에도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면서 “원고의 면직처분취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대법원에서 확정판결).
- 검찰은 의혹 제기 후 수사를 하지 않았고, 특검은 2010년 9월 박기준 지검장의 혐의에 대해 모두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증거가 불충분하고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혐의 결정.

○ 선정의 변

- 파렴치한 의혹의 주인공으로 검찰에 대한 신뢰를 추락시켰고, 법원에서도 면직의 정당성이 인정되어 공직자로서 심각한 결격사유를 가진 인사임

9) 김용판(새누리당,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대구 달서구을 예비후보)

- 주요경력 : 서울지방경찰청 청장(2012.05~2013.04)
- 심판명단 제안 단체 : 국정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진상 및 축소은폐 의혹 규명을 위한 시민사회 시국회의(국정원 시국회의), 시민제보

○ 선정사유

- 국정원 등 국가기관이 대선에 개입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댓글을 썼다는 사실을 선거 전에 일부 파악했음에도, 이를 선거전에 발표한 중간수사결과발표에서 누락해 결과적으로 당시 박근혜 후보측에게 유리한 환경을 만들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함.
-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 수사를 축소·은폐해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로 공직선거법과 경찰공무원법 위반, 형법상 직권남용 기소되었지만, 대법원에서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와 선거운동을 엄격하게 구분해 무죄를 선고했음. 그러나 김용판 전 경찰청장의 진실이 누락된 중간수사결과 발표가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음
- 2013년 8월 국회에서 열린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에 출석하여 증인 선서를 거부함. 국회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증인 선서를 거부하여,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를 존중하지 않은 당사자로 국회의원이 될 자격이 없음

○ 선정의 변

- 대법원 무죄에도 불구하고 김용판 전 경찰청장이 선거 전날 국가정보원의 선거개입 사실을 파악하고도 중간수사결과 발표에서 누락해 결과적으로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은 명백함.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을 엄정하게 수사하지 못한 책임도 없어지지 않음. 특히 국회 국정조사의 증인선서를 거부하여 국회를 무시한 김용판 후보자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될 자격에 결격사유가 분명함.

■ 붙임 3. 2016총선넷 사업계획

2016총선넷 향후사업계획

1. 공천부적격자 심판운동

1) 향후 주요 일정

- 3월 3일 1차 명단 발표에 이어 3월 중순 2차 공천부적격자 명단 및 공천부적격자 명단 전체 발표 예정
- 공천부적격자 신고 및 제보 캠페인 : 현재까지 총 200여인에 대한 제보 접수되어, 분류 및 분석 작업 진행 중(www.2016change.net, ask2016change@gmail.com)
- 각 정당에 각 단체에서 발표한 공천부적격자 명단과 공천부적격자 신고 및 제보 캠페인(2.23~3.6일) 기간 중 접수된 내용 중 사실로 확인된 후보들에 대한 자료를 각 정당 공천심사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임(3월 10일 전후)

2) 공천부적격 인사들에 대한 낙천 촉구 시민행동(순차적으로 진행)

- 낙천운동 대상자로 선정된 인사들(2016총선넷 선정+각계각층 선정)에 대한 정보와 공천 부적격자로서의 선정 근거를 각 정당 지도부에 직접 전달(항의 방문 및 기자회견)
- 각계각층, 부문, 의제, 지역, 단체별로 주요 낙천촉구 대상자 사무실 앞이나 정당 사무실 앞에서 일일이 기자회견을 통해 낙천 촉구 대상임을 밝히고, 낙천 촉구 입장 발표전달
-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공천 부적격 인사들에 대한 낙천 촉구 캠페인

2. 낙선운동 대상자 선정 및 낙선운동

1) 낙선운동 대상자 선정 및 낙선운동

- 공천 부적격자로 선정된 이들 중 공천이 강행된 이들과 추가로 부적격 사유가 확인된 후보자를 중심으로 3월 중순에서 3월 말까지 낙선운동 대상자 선정을 위한 광범위한 리서치 진행
- 2016총선넷이 발표한 공천부적격 인사들이 공천이 강행될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낙선운동 대상자로 선정
- 각계각층, 부문·의제·지역별로, 각 단체 차원의 낙선운동 대상자 발표와 병행

- 4월 2일 전국 유권자위원회 워크숍 통해 최종 낙선대상자 선정(예정)
 - 4월 3일~4월 12일까지 전국적 범위에서 실제 낙선운동 전개
- 2) 노동개약 강행 주도 후보, 테러방지법 강행 주도 후보에 대한 특별한 대응
- 테러방지 국민감시 악법인 '테러방지법' 강행주도 후보들(법안 대표 발의자, 여당 지도부 등)에 대해서는 2016총선넷 차원뿐만 아니라 전국의 인권시민단체들과 함께 별도로 낙선운동 검토 및 추진
 - 노동개약 중단 촉구, 노동개약 정당·후보 심판 선언 예정. 양대노총(민주노총/한국노총), 경제민주화와 올들의 총선연대, 총선청년네트워크 등과 함께 공동 선언 발표하고, 공동 활동 전개 예정.

3. 유권자위원회 조직과 유권자운동

- 전국에서 1만 명 이상의 유권자들이 참여하는 유권자위원회 결성 중
- 온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유권자 위원 모집하고, 다양한 유권자 행동 전개 예정
- 3월 9일(수) 7시, 참여연대 강당. 유권자 운동 준비하는 각계각층 연합회의(예정)
- 대전총선네트워크, 총선청년네트워크, 경제민주화와 올들의총선연대 등은 1천명 안팎의 유권자위원들을 모집하고 활동 준비 중
- 온라인 활동을 기본으로 하되, 낙선대상자 선정 및 정책 선호 투표 등도 병행
- 4월 2일 전국 유권자위원회 워크숍 진행
- 4월 초 전국 유권자 대회 진행 예정
- 3월 중순~4월 12일까지 전국 유권자 투표 참여 캠페인 공동 진행

4. 약속운동

- 3월 10일까지 2016총선넷 참가 연대기구 및 지역별 정책의제 수집
- 정책위원회 회의 및 유권자위원회와 온라인투표 등을 통해 정책의제를 선별하여 우선순위 선정
- 각 정당 및 후보자에게 우선순위로 선정된 2-30개 의제에 대한 약속운동 진행
- 4월 초 약속운동 결과 공개

2016총선넷, 공천부적격자 1차 명단 발표 기자회견문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 대표가 될 자질과 자격이 없는 후보들을 거부하는 국민들의 행동, 민주주의·민생·평화의 위기를 극복하는 정치를 만들기 위한 전국 유권자들의 실천이 계속될 것입니다.”

3월 3일 오늘, 이제 봄기운이 서서히 느껴지는 시절입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정치 참여 일정인 국회의원 총선거(총선)도 40여 일 앞으로 다가 왔습니다. 그런데, 자연의 봄은 어김없이 왔지만, 우리 사회의 봄은 전혀 오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것은 박근혜 정권의 ‘혼용무도’한 통치 행태가 계속되고 있고, 북한의 핵 실험과 위성발사가 있자 개성공단 폐쇄라는 자해적 제재로 신북풍이 일어나고 마치 당장이라도 테러가 곧 일어날 것처럼 국민들을 겁박하는 기만의 정치가 계속되면서 한국 사회의 현실과 미래가 참으로 불투명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3월 2일 밤에는 많은 뜻있는 정치인들과 국민들이 필리버스터까지 진행하며 강력히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테러를 빙자한 국정원강화법이자 국민 감시 악법인 ‘테러방지법’이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의해 강압적으로 처리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아무리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고, 많은 국민들의 반대가 존재함에도 무조건 자신들의 정책과 법안들을 밀어붙이는 독재적 행태가 우리 국민들에게 전혀 봄을 느끼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선거가 40일 남은 지금, 예년과 같다면 대다수 국민이 선거에 대한 관심이 넘쳐나고, 온갖 방송과 매체들도 앞 다투어 선거에 대한 뉴스를 내보냈을 것입니다. 정당의 공약과 정책에 대한 평가와 이슈가 되고 있는 정책과 공약에 대한 보도가 넘쳐나고, 다종다양한 유권자들의 캠페인과 목소리가 뉴스 화면과 지면을 가득 메웠었는데, 연일 이어지는 남북의 강경대응과 북풍뉴스로 선거가 예정대로 치러지는지 알기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오늘부터는 달라질 것을 기대해봅니다. 유권자들의 선거에 대한 관심과 참여는 다른 이슈로 막을 수 없습니다. 분노한 유권자들이 작금의 상황을 좌시만 하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 전국 방방곡곡에서 이번 총선을 통해 우리 사회가 확 달라져야 한다는 목소리, 집권세력에 대한 엄정한 중간평가가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 민의 대표자로서의 자질이나 자격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이들은 퇴출시켜야 한다는 목소리, 테러병자 악법을 강행하고-노동개악을 주도하고-청년을 기만하고-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밀어붙이고-환경과 과학에 앞장서는 등등의 잘못된 정책에 책임이 큰 후보들은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7일 부문·의제·지역별 연대기구와 1천개가 넘는 단체들의 힘과 지혜를 모아 출범한 2016총선시민네트워크가 바로 그런 국민들의 목소리를 종합하고 집약한 활동을 준비했고, 드디어 3월 3일 오늘 1차로 낙천운동 대상자를 발표하고, 이를 여야 정당에 전달하여 공천부적격자의 낙천을 촉구하는 시민행동에 돌입합니다.

오늘 1차로 발표된 공천부적격자 9인의 면면을 보면,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을 넘어, 유권자들의 축제이자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에서 ‘후보자’로 나온다는 것 자체가 부적절한 인사들임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이들을 결국 공천하게 된다면 해당 정당들 역시 국민들로부터 규탄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2016총선넷은 각 정당이 공천부적격자들을 공천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하고 나선 것입니다.

시민들의 참여 열기도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총선넷의 공천부적격자 신고 및 제보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고, 각계각층에서도 공천부적격자(낙천 촉구) 명단이 계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또한, 온-오프라인에서 낙천 낙선운동, 후보자 정보 유통 캠페인, 투표 참여 독려 활동 등을 함께할 ‘유권자위원회’에도 참여가 이어지고 있고,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 이번 총선에서 이슈가 되어야 할 좋은 정책과제들에 대한 제안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2016총선넷은 현 집권 세력은 물론 그동안의 실정과 실패에 대한 기억과 심판운동과 함께, 국민의 대표가 될 자질과 자격이 없는 이들에 대한 기

억과 심판 운동을 동시에 전개해나갈 것입니다. 또한 기억과 심판운동 뿐만 아니라 청년세대들과 국민들을 위한 좋은 정책과 공약을 제시하고, 각 정당들과 후보들이 이를 공식적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하는 약속운동을 진행할 것입니다. 이번 총선이 한국 사회가 헬조선, 최악의 양극화와 불평등, 그리고 민생고에서 탈출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활동해나갈 것입니다.

이번 총선은 집권세력의 실정과 잘못된 정책에 대한 심판의 장이 될 것입니다. 또한 부적격한 후보자들 역시 유권자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2016 총선넷은 이러한 아래로부터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더 노력할 것입니다. 국민의 대표가 될 자격이나 자질이 없는 후보들을 거부하는 시민들의 행동과, 민주주의와 민생, 평화의 위기를 극복하는 정치를 만들어내고, 정치를 바꾸기 위한 전국 유권자들의 행동은 계속될 것입니다. 끝.

2016년 3월 3일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